

經濟發展과 經濟倫理

嚴 永 錫*

<目 次>

- I. 序 言
- II. 經濟發展의 哲學
- III. 經濟發展과 經濟倫理
- IV. 經濟倫理의 確立을 爲한 政策課題

I. 序 言

지난 30여년간 韓國은 어느 정도의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라도 일단은 경제의 크기를 키워야겠다는 일념 하에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왔다. 이러한 量的成長一邊倒의 경제정책은 전반적으로 물질적 풍요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나 급변하는 국내적·국외적 환경 때문에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

대내적으로 보면 우선 과거의 量的成長 위주의 經濟政策의 矛盾이 누적된 결과 여러 部門間의 不均衡現狀이 초래되는 등 경제구조의 모순이 두드러지게 되었다는 점이 우리로 하여금 經濟發展戰略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構造的 矛盾의 심화는 주요 經濟主體間의 갈등을 유발시킴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經濟하려는 의지」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욱이 1980년대 후반 이후 두드러진 우리 사회 전반의 민주화 경향에 힘입어 그동안 잠재되어 왔던 여러 階層·集團들의 불만이 폭발적으로 표출되고 있으나 우리 사회는 집단간의 利害葛藤關係를 민주적으로 해결·조정하는 경험이 부족하고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미처 형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집단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화의 추세 하에서 사회

* 韓國外國語大學校 經濟學科

도처에 집단이기주의가 성행하게 되었고, 각 경제주체들의 가치관에 혼란이 유발되었을 뿐 아니라, 경제정책수립 과정에 있어서도 經濟論理보다 政治論理가 우선하는 奇現象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민주화 정착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經濟發展戰略을 量的 成長體制로부터 質的 成長體制로 전환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또 대내적인 어려움만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심각한 대외적 도전에 직면하여 있다. 蘇聯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과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의 진전 등은 新國際經濟秩序의 構築을 불가피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대규모의 변화에 여하히 적응하면서 남북통일에 대비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경제는 脫冷戰時代의 對內外的 變化에 즈음하여 과거의 權威主義的 經濟運營體制로부터 민주적인 체제로의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꾀하여야 하는 歷史的 轉換期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하히 經濟的 質的 內實化를 기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제는 기왕의 官主導的 開發方式에서 탈피하여 개인의 自律的이고 創意的인 노력에서 발전의 원동력을 찾아야 할 때이다. 기업활동의 창의성을 억제하고 經濟能率의 向上을 제약하는 諸要因은 제거하고 자율적 질서에 바탕을 둔 「게임의 규칙」을 확립하는 것이 바로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정부의 역할도 새로이 조정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각 경제주체들의 경제윤리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分配正義의 確立, 經濟力 集中의 緩和와 公正 去來制度의 強化를 통한 市場經濟制度의 強化 등의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틀 안에서 다음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전략의 특징과 문제점을 기술하고, 제III절에서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있어 경제윤리의 확립이 갖는 중요성을 조감해 보려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제윤리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의 制度的 改善策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가지를 지적함으로써 글을 맺으려 한다.

II. 經濟發展의 哲學

1. 韓國의 經濟開發戰略

과거 開發期間 동안의 韓國資本主義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면 市場機能에 의존하면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해 왔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관리의 목적은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시장경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動態的 效率性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한편으로는 급속한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가피하게 인플레이션이나 公害, 獨寡占의 幣害와 같은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데에는 異論의 여지가 없다.¹⁾

산업화의 과정에서 開發途上國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는 공업에 투자할 자본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과 공업기술이 뒤져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개발도상국들의 經濟開發政策은 民間企業들에게 저렴한 費用으로 資本과 技術을 공급해 줌으로써 投資誘因을 자극하는 戰略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전략도 정부가 경제개발을 능률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육성시켜야 할 戰略産業部門을 선정한 다음 각종 정책을 통하여 적절한 誘因을 제공함으로써 民間의 投資를 이 전략산업부문으로 하는 것이었다.

한국의 60년대 이후의 성장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의 성장정책의 제일 강령은 「經濟第一主義」였다. 즉, 經濟發展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기본방침으로 分配政策이나 社會福祉政策 등은 經濟開發 이후로 미루어졌다. 우선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분배의 문제는 성장이 이루어진 다음에 고려한다는 기본방침이 세워지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빈곤층이 형성되는 등 부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우리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로는 輸出이 경제성장전략의 중심이었다. 정부는 민간기업들이 공업부문, 특히 輸出産業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해 주

1) 資本主義經濟體制는 일반적으로 物價上昇과 失業 등 市場機能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과 아울러, 所得分配問題를 平等한 방향으로 유도하지 못한다는 기본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하여 시장기능이 分配面에서 보이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累進稅, 醫療保險 및 기타 社會保障制度 등을 정책적으로 도입하여 分配面의 平等度を 높이도록 하고 있다.

었다. 재정투자를 통한 사회간접자본의 축적뿐만 아니라 조세·금융상의 각종 유인조치, 노동조합활동의 규제를 통한 저임금유지정책 등이 모두 수출에 서의 비교우위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施設投資財源은 外資導入으로 충당하였다. 빈약한 국내저축으로는 막대한 규모의 재원을 충당할 수 없어 外資導入法을 제정하여 상업 및 공공차관 형식으로 외자를 도입한 것이다.

셋째로, 이러한 경제제일주의정책은 철저하게 정부주도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추진되었다. 경제발전은 정부의 계획 하에 운영되며, 민간기업들은 정부가 수립한 계획에 맞춰 자신에게 할당된 몫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은 우선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戰略產業部門을 설정한 후에 이 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의 정책적 배려를 한다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형성된 것이다.

경제성장전략의 마지막 특징은 不均衡成長戰略이다. 60~70년대의 성장전략은 철저한 공업우선의 원칙 하에 이루어졌으며, 공업분야에서도 중점육성분야를 선정하여 이 분야에 集中投資함으로써 최대의 雇傭效果와 成長效果를 얻고자 하였다. 제3공화국 초기에는 공업뿐 아니라 農業發展도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설정되었으나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어 70년대에 이르러서는 제4차 경제계획 말기부터 대두된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농업에 대한 지원이 약해져 아예 농업에 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되었다.

2. 經濟成長爲主의 發展哲學의 問題點

이러한 發展戰略은 나름대로는 長點도 있었고, 또 短點도 있었다. 일단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경제발전을 바라는 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여 경제건설을 지상의 목표로 하는 정책방향은 쉽사리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이제 우리는 先進國의 대열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중남미의 여러나라들처럼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마느냐 하는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다. 현재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빈곤에서 탈피하는가 하는 피동적이고 일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舊態를 벗고 명실공히 선진적인 체도를 갖추어 自生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느냐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체제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경제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도 자본주의적인 제도가 정비되어 각 부문이 有機的인 總體를 이루어야 한다. 이

러한 우리의 경우에는 경제제일주의가 강력한 정부에 의하여 추진되면서, 여러 부문간의 不均衡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불균형, 국제수지의 불균형, 투자와 저축의 불균형, 實物部門과 金融部門의 불균형 등 여러 부문에 걸친 불균형 현상이 우리 경제의 發展潛在力을 저해하고 있다.

經濟를 부흥시키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나 행정력 자체는 경제개발에 있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조건 중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으나, 「經濟第一主義」가 문제시되는 이유는 「경제의 성장」이라는 大前提 때문에 사회의 여타 부문의 성장이 방해받기 때문이다. 교육, 과학, 기술 등 경제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들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게 되면 成長의 잠재력이 약화되어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뿐만아니라 政府의 主導에 의한 경제발전전략은 經濟運用의 效率性 면에서도 문제를 가질 수 있다. 경제구조가 복잡해지면, 정부주도만으로는 경제를 운용하기가 어려워진다.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계획은 자칫하면 民間企業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성격을 띠게 되기 보다는 정부 자체의 實行計劃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官僚組織體가 갖는 속성으로 인하여 정부는 열가지 목표 중에서 한 두 가지를 선별해서 무리가 있더라도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경제정책적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단기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면 당장에 可視的인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지라도 다른 부문에서는 무리가 생겨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잠식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우리 경제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도 이러한 경제운영 방법으로 인하여 경제가 自生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닦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經濟發展의 理念을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우리 경제발전전략의 기본이었던 先成長 後分配의 철학은 資源을 戰略產業에 집중분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성장의 지속과 분배의 형평성 회복이라는 두 개의 相互排他的인 수 있는 목적 사이에서 政策的 選擇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게 되고, 이러한 선택이 시기를 놓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추진해 온 배

경에는 선진국의 경험에서 볼 때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分配構造가 好轉될 것이라는 피상적인 기대가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所得分配構造의 개선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각 경제주체들의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정부의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노력에 의해 성취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이다. 경제발전이 경제주체들의 自發的 活動에 입각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 의하여 추진될 경우에는 이러한 소득분배를 중심으로한 경제주체들의 상호작용이 배제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불만이 의도적으로 억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所得分配構造가 자동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경제발전을 공업화를 통하여 이룩한다는 명제는 기본적으로 타당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농촌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60년대 초기에는 農業에도 상당히 신경을 썼던 흔적이 역력하고, 70년대에도 농업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80년대에는 정부정책에서의 農業의 중요성은 더욱 감소되었다. 농업의 중요성이 항상 강조되었던 60년대와 70년대에도 농업부문에 대한 投資는 항상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農業部門에 대한 정책의 미비는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이 진전되면서 우리 농업전체가 위협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對應策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였다.

한국의 발전전략의 또 다른 특징은 工業化가 外資에 크게 의존하여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산업화의 초기에 외자도입은 雇傭擴大를 위하여 필요하였고, 外延的 成長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外資導入은 부족한 자본을 충당하는 데에는 효율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외자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國內資本形成을 게을리하게 하였으며, 외자의 도입을 정부가 보증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정부에 의존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기업들의 이러한 태도는 技術開發에도 연장되어 기술의 자체 개발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技術開發을 뒷전으로 미루고 낮은 임금과 정부의 보호에만 의존해 왔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여태까지 우리 기업들은 독자적인 技術을 개발하기 보다는 로열티를 지불하고 外國의 先進技術을 導入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아래 주로 외국의 기술력에 의존해 왔다.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은 고도의 기술력에 바탕을 둔 고급품의 생산보다는 中下級品の 低價供給에 의존했었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승하고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국가들의 저임금에 기초한 맹렬한 추격과 선진국들의 기술공세 사이에서 곤경을 치루고 있는 것이다.

經濟開發戰略上 정부는 몇몇 기업 혹은 산업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선택된 산업이나 기업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전체가 그 부담을 나누어 지게 된다. 이렇게 國民的負擔을 토대로 하여 성장한 소수의 몇몇 기업들이 성장의 열매를 독차지하게 될 때, 국민들은 이의를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우리 기업들이 모든 사회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을 요구받는 직접적인 이유이다.

III. 經濟發展과 經濟倫理

1. 發展과 意識構造

發展이란 論者에 따라 그 概念規定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고, 또 그 개념을 구성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더 큰 偏差를 드러내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發展」이란 그 자체가 價值含蓄的인 개념이며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理想的인 價值觀에 대한 것이다. 발전, 특히 「經濟發展」하면 우리는 우선 외형적인 경제지표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 사실이나, 여기에서는 보다 質的인 요소들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면에서는 社會學者 金璟東 教授의 發展에 대한 개념규정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金璟東 교수에 의하면 發展이 추구하는 核心價值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1) 發展의 目標은 우선 인간들의 삶의 質(Quality of Life)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삶의 질은 우선 물질적·경제적 풍요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인간의 정신적·심리적 건강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2) 「삶의 질」의 向上은 어느 특정계층이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社會의 모든 成員에게 골고루 확산되는 分配의 公正性을 수반하여야 한다. (3) 이러한 價值들이 의미를 갖는 근거는 이러한 것들이 보장됨으로써 인간을 자신들이 타고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自我의 完成 혹은 自我의 實現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전」이란 이러한 價值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社會構造 및 制度를 형

성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社會의 成員들로 하여금 자신의 自我實現을 위해서 필요한 資源의 配分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정당하게 배분받을 수 있는 社會構造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곧 發展인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여태까지 우리가 추구해 왔던 經濟成長이란 이러한 發展過程에 필요한 資源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적인 수단이며 그 자체가 目標일 수 없다.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도 資源이 어느 정도 형성된 국면에서 社會成員들의 自發性에 기초한 發展의 단계를 여하히 轉換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보면 人間의 自發性이나 創意性이란 그 자체가 목표이지 수단일 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 질문도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사회의 발전, 혹은 사회구조의 변동이란 그 사회성원들의 意識構造의 變化와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社會成員들의 自發性和 創意性的 振作은 發展의 目標이자 동시에 發展의 手段인 것이다. Spengler에 의하면 한 국민의 政治·經濟的 發展의 狀態, 速度 및 方向은 社會成員들의 마음속에 있는 내용에 크게 의존한다. 하나의 低開發社會를 발전된 社會로 변형시키자면 그 사회를 지도하는 엘리트와 그 사회의 성원인 국민들의 마음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發展을 이룩하는 데 있어 人間의 意識構造는 가장 核心的인 요소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社會의 發展 혹은 歷史의 變換에 있어 물질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 중 어느 것이 보다 중요하고 선행적인 요소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 많은 論者들이 나름대로의 이론을 개진해 왔고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나, 여기에서 그러한 理論的 論爭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우리가 여태껏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었고, 이제 이 時點에서 더 이상看過되어서는 안 될 우리 사회의 발전의 動因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잠재력을 啓發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렇듯 사회성원들의 의식구조가 우리 사회의 발전에 있어 決定的인 人間要素임은 자명하나, 人間의 意識 또한 그 범위가 무척이나 다양하고 넓으며 또 그 사회체제의 성격에 따라 偏差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두 마디로 압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資本主義 經濟體制를 구성하는 주요 경제주체들의 經濟倫理 특히 企業家들과 勞動者들의 經濟倫理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2. 資本主義 經濟體制과 民主的 게임規則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핵심은 「게임의 규칙」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自律秩序」와 「競爭」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게임의 규칙」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특성이며, 이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민주적 질서가 와해된다. 또 한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성원들의 同意와 自發的 協調가 필수적이다. 사회성원들의 자발적 협조는 게임의 규칙이 민주적으로 결정되고, 또 그 규칙이 공평하고 엄정하게 실행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市場經濟體制的 長點은 바로 競爭이다. 경쟁이 존재함으로써 개별 경제주체들의 이익이 극대화됨과 동시에 사회적 이익도 極大化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의 效率性 역시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게임의 규칙을 준수할 때에 극대화되는 것이며, 이것은 또 각 경제주체들에게 均等한 기회가 주어질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경제주체들의 「자율성」과 「경쟁」 그리고 「게임의 규칙 준수」는 서로 맞물려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3. 企業倫理의 確立

企業은 自由市場經濟體制를 이끌어 가는 추진제이며,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을 주도해 온 주역임에 틀림없다. 기업은 또 이러한 성장의 가장 큰 受惠者이기도 하다. 기업이 우리나라의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앞장서야 하는 이유도 이러한 점에 연유한다. 경제성장의 주역으로서의 기업과 기업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그에 못지 않게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누적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목적은 투철한 企業家精神을 토대로 技術革新과 과감한 投資로 利潤率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기업은 종업원들에게 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場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종업원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 하는 방안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의의가 있는 일이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도 人間尊重的 經營理念이 확립되어야 할 때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인간존중의 경영이념은 근로자들의 물질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개인의 創意性和 能力을 최대한으로 계발하는 것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企業經營狀態를 근로자들에게 公開하여 근로자들의 自發的 參與를 유도하는 노력과 근로자들의 의견을 경영에 적극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4. 勤勞倫理의 確立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그다지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해 온 근로자들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우리의 근로자들은 세계적으로도 근면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으나, 지금은 근로자들의 勤勉性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지적이 빈번하다. 이른바 3D현상이 만연하여 힘든 제조업의 일자리를 마다하고 손쉬운 서비스업의 일자리만을 찾게 되었으며, 勤儉節約하던 자세도 약화되어 과소비 풍조에 휩쓸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부나, 근로자 혹은 기업의 어느 일방만을 탓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기업가들은 기업가들대로 투자의욕을 상실하고 손쉬운 돈벌이와 便法主義에 매달리고, 근로자들은 또 근로자들대로 일하지 않고 헛뜨게 쓰는 데에만 몰두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지속적인 經濟成長과 所得의 向上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잃어버린 勤勞意慾을 되찾아야 한다는 이유가 있다.

우리 근로자들이 勤勞意慾을 상실한 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줄 알지만, 간략하게 몽둥그려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근로의욕의 쇠퇴는 아직 職業精神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高度의 經濟成長의 결과 生活水準이 向上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한국의 職業觀은 기름때 묻히면서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賤視해 왔다. 비록 산업현장에서 일하더라도 그것은 그 일을 자신의 天職으로 생각하여서라기 보다는 앞으로 잘 살고 출세하기 위해 밑천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근로자들도 자연히 소비생활과 여가시간의 활용에 대해 관심을 더 갖게 되고, 예전과 같이 밤낮없이 일하고 악착같이 저축하던 태도는 점차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제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벌어야 하겠다는 집념은 약해지고, 무리해서 돈을 벌기 보다는 다소 적게 벌더라도 즐기면서 살겠다는 태도가 확산되었다.

둘째로, 이러한 현상들은 근자에 발생한 政治・經濟的 變化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정치적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 집단들의 상이한 이해관계와 주장들을 조화롭게 수용할 만한 機制는 채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동안 정당한 대우를 못 받아 왔다고 생각하던 근로자들이 불만이 고조되었다. 더욱이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財테크 등에 의한 불로소득의 발생 등으로 賃金所得者들의 생활이 불안정하게 되자 성실한 근로자체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

IV. 經濟倫理의 確立을 爲한 政策課題

1. 所得分配構造의 改善

1) 不勞所得의 根絶

所得分配의 不均衡의 심화는 비단 국민의 위화감을 조성하여 사회의 안정을 해칠 뿐 아니라, 國民經濟의 效率을 좀먹음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의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 최근에는 급격한 임금구조의 변화로 말미암아 소득분배구조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저소득계층의 불만이 해소되었다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불만이 증폭되어 가는 奇現象을 보이고 있다. 기업가들의 불만은 급상승한 임금수준으로는 도저히 國際市場에서 價格競爭力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며, 근로자들의 불만은 임금상승폭을 훨씬 상회하는 토지·주택가격의 급등과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실질생활수준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자의 주장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어 어느 한 쪽만을 탓할 수는 없다. 이 문제의 초점은 임금을 둘러싼 기업가와 근로자간의 의견차이에 있다기 보다는 投機性 所得의 急増이라는 賃金外的인 면에 있는 것이다.

투기성 소득의 급증으로 인한 不勞所得의 創出과 이로부터 파생된 富의 不均衡的 分配가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불로소득 문제는 그 자체가 도덕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막대한 규모의 불로소득이 불로소득계층의 過消費로 직결되면서 사회전반적으로 가치관의 혼란현상을 야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사회가 先進產業社會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富의 不均衡을 是正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富의 不均衡을 초래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土地의 不均等 分配現狀이다. 우리나라 토지문제의 핵심은 극소수의 계층이 대부분의 土地를 所有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不動產의 77%가 上位 10%에 의해 소유되고 있으며, 下位 40%는 단지 1%의 부동산만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않거나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자체가 엄청난 수익을 보장하게 되는 機制를 없애고 현재의 불평등 분배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실제로 이러한 맥락에서 土地公概念制度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의견은 이 제도가 불필요하게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부담을 줌으로써 강력한 저항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지 및 주택정책은 모든 국민들에게 부동산 자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며, 대부분의 선량한 국민들의 재산과 의욕은 보호하되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는 上位 10% 정도의 資産階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책으로서는 우선 부동산에 대한 세금부과기준인 課標를 빨리 현실화하는 것과, 稅率과 세금부과대상을 현실성있게 조절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세금부과대상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위 10~20%의 극소수 자산계층에 한정시킴으로써 여타의 국민들에게서 유발될 수 있는 租稅抵抗을 낮추는 일이 중요하며, 세율도 불필요하게 고율로 책정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도 집행이 가능하고 장기간에 걸쳐 소기의 資産再分配 效果를 얻을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서 한가지 빠뜨려서는 안 되는 사항은 세금의 부과와 징수를 엄정하게 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無用之物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제도가 가지고 있는 좋은 취지마저도 퇴색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해주는 토지·주택 정책이 마련될 때 우리 사회가 안정될 것이며, 선진국으로의 도약에 필요한 生産的인 企業活動과 성실한 勤勞意慾을 되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실상 최근 몇 해 동안 우리 근로자들의 實質賃金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우리 경제의 國際競爭力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나, 이 문제도 임금의 상승을 억제하려는 노력에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근로자들이 임금의 상승없이도 생활의 안

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住宅政策이 병행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부동산 가격상승, 인플레이션의 지속 등으로 근로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所得上昇은 매우 미미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느끼는 相對的 不平等感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 租稅政策

分配構造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租稅構造에서도 전환점이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구조를 보면 간접세 위주로 되어 있음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간접세는 財産과 所得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구조가 간접세 위주로 되어 있으면 조세의 所得分配效果가 상실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지금과 같이 한편으로는 不勞所得 創出機制가 존재하고 이들에 의해 전전한 경제행위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계층의 피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기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경제가 침체될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가 자체가 신뢰성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계층만이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成長의 受惠者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조세구조를 간접세 위주에서 점차 직접세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히 勤勞所得보다는 財産所得에 대한 課稅의 비중을 대폭 높임으로써 현행 조세구조의 不合理性을 시정하고, 전전한 근로의욕을 과중한 세금으로 손상하지 않고 分配構造의 개선을 도모하는 조세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간접세와 직접세의 비율은 6:4정도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전체 조세수입 중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이상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조세구조가 얼마나 비합리적인가를 보여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조세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쳐 直・間接稅의 비율은 계속 악화되어 왔으며, 1980년대 후반에 와서야 겨우 주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相續稅나 贈與稅 등과 같이 富의 재분배를 위한 稅制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도 자체는 어느 나라 보다는 강력한 성격의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제들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새로운 세제를 다시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세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더라

도 상당한 정도의 再分配效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실정을 두고 볼 때 이러한 세금들 역시 세율이 낮다기 보다는 效果적이고 嚴正하게 집행되지 못하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으므로 이러한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稅率을 現實的으로 조정하고 집행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또 財政의 社會的 機能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擔稅率을 현재의 20%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늘어나는 財源은 사회복지의 확충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富의 移轉效果를 달성하고, 分配構造의 개선도 꾀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담세율은 선진복지국가의 40~50% 수준에 비하여 훨씬 낮은 수준인데, 이러한 정도의 국가재원으로는 늘어나는 복지 및 공공적 수요에 대처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다수의 租稅抵抗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담세율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3) 社會福祉制度的 確立

급속한 성장의 이면에 감추어진 우리 사회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社會的 統合과 安定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제도의 대폭적인 확충이 긴요하다는 데에는 대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富의 不平等을 완화하고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福祉制度를 통한 富의 移轉과 社會統合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수의 자산계층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여기에서 마련된 財源을 도시와 농촌의 빈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國民年金의 보급·확대에 사용하며, 실업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근로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이 적절하다. 이러한 社會的 連帶와 統合을 위한 노력은 우리 사회 내부의 화합과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독일의 경험이 보여주는 것처럼 민족의 통일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는 아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서구의 선진국들이 어떤 면에서는 과도한 사회보장제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社會保障財政의 수입면에서나 지출면에서 공히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비해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財源은 1986년말 GNP 對比 2.83% 수준으로 1970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 나라와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아

르헨티나나 칠레 등의 국가들의 7~8%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 정부재정에서 사회보장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1970~80년대를 통하여 4~6% 선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에 보면 1983년 현재 스위스가 49.5%, 미국이 34.0%, 서독이 50.0%, 일본이 17.3% 등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나라들에서 過多한 社會保障豫算으로 인하여 資源配分의 非效率性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가 適正線인가 하는 데에는 아직 문제가 남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회보장제도가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2. 市場制度的 活性化

우리가 지향하는 발전전략은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經濟制度的 확립이다. 우리나라의 經濟發展이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정부주도적 성장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새로운 여건과 성장단계에 알맞는 새로운 발전전략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바탕을 둔 市場制度的 活性化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믿어진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자유롭고 공정한 市場競爭의 여건을 마련하고 外部經濟效果가 큰 社會間接資本의 확충과 환경보전 등을 위한 기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1) 政府介入의 合理化

우리 경제가 이루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가 권위주의적 경제운영의 방식을 民主的인 體制로 전환하는 것이다.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의 결과는 展示의 成果를 추구함으로써 생기는 效率의 喪失, 資源의 浪費, 均衡의 喪失 등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역할이 모든 면에서 축소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정부가 과거의 전략에서 탈피하여 개인과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정부역할의 축소조정이 필요하나, 시장경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한다는 의미에서는 오히려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장경제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과 아울러 과거의 경제성장전략의 부작용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이 누적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自律的 機制에 맡겨두기 보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自生的 發展도 이러한 토대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의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전환이 요청된다.

우선 정부가 公企業을 통해 직접 生産活動에 참여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民間部門의 競爭에 따른 기업의 흥망성쇠에 정부가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책임을 지는 일은 되도록 삼가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존적인 태도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고, 기업들이 나름대로의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정부의 認·許可制度를 축소하고 개선하여 민간부문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금융기관의 자율적 경영을 촉진시키는 일이다. 과거 官治金融時代에는 정부가 금융기관의 인사문제나 운영에 개입하여 왔으나 國際化·開放化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人事權을 독립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이러한 데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어야 할 것이나, 환경보호,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같은 公共財의 供給을 위한 政府의 機能은 오히려 증대되어야 한다.

2) 公正去來制度의 確立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거래와 경쟁은 독과점업체들에 대한 규율이 가능할 때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시장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公正去來制度의 確立이 요청된다. 이를 위한 制度改革의 방향은 기존의 공정거래법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經濟政策決定에 있어서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 위상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公正去來制度가 실질적인 경쟁의 촉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의 폐해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不公正去來의 原因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法의 개정·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公正去來制度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 정부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격상되어서, 정부의 제반 경제정책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企業의 社會的 責任을 높이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요즈음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유는 과거의 성장과정에서 우리 기업들, 특히 大企業들의 成長이 국민들 모두의 부담에 바탕을 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소수의 대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는 우리 사회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社會問題들이 상당부분 기업들에게 그 책임의 소재가 있는 바, 기업들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법규를 준수하고 공익을 해치지 않으면서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합치되는 기업활동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대표적인 反社會的 企業行爲로 獨寡占을 형성하는 행위들을 수 있다. 기술이나 그밖의 이유로 자연적 獨寡占이 형성되었을 때는 獨寡占業體는 獨寡占利潤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재벌기업들이 대규모 집단(Conglomerate)을 형성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몰아내고 創造的 革新(Innovation)의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의 이익에 反하는 기업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은 부당한 방법으로 축적된 부를 사회에 환원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의 축적에 있어 反社會的인 수단을 쓰지 않아야 할 의무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진정한 기업가라면 재산의 축적을 위하거나 자기 자손을 위하여 기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그 자체를 위하여 기업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

3) 經濟力集中의 緩和

經濟力集中이란 國民經濟에서 활동비중이 큰 다수의 기업들이 특정인의 지배 아래 놓인 大規模企業集團으로 편성된 상황을 지칭한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生産額比重으로 봤을 때 제조업의 거의 전업종이 獨寡占化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독과점적 산업조직이 자본주의의 본질적 특성이라고는 할 수 없고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전적으로 開發戰略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²⁾ 우리나라의 30대 기업집단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985년을 기점으로 해서 점차 하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우리 경제의 많은 문제들이 경제력이 소수의 기업집단에 집중됨으로써 나타난 것이므로 앞으

2) 우리나라 대규모 企業集團은 수많은 업종에 걸쳐 수십개의 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모든 그룹이 거의 다 비슷비슷한 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회사를 경영하는 방식도 비슷하다. 日本의 재벌기업의 後身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종합상사들이라고 할 수 있으나, 日本의 綜合商社와 우리나라의 기업그룹은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대기업 그룹의 크기는 국민경제의 규모나 수출 규모 등에 비하여 과도하게 큰 것이 사실이다.

로도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30大 기업집단들은 出荷額 기준으로 거의 4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5大 기업집단들은 무려 2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들은 企業體數에 있어서는 98% 가까이 되면서도 생산액 기준으로 40%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類型의 産業構造가 가지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산업구조에서는 자본주의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創造的 革新」(Innovation)이 뒷받침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원래 국민경제에 있어서의 기업의 역할은 「창조적 혁신」이고, 혁신이란 Schumpeter가 말한 바와 같이 企業利潤과 資本主義體制 發展의 원천이다.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혁신이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기틀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 있어서 經濟力集中은 市場集中과 總括集中의 두 유형중에서 통상 후자의 것을 가리키는데, 그 주체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위 財閥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력집중의 특징을 보면, 재벌이 國民經濟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각 재벌들은 총수와 그의 가족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운용이 소수의 재벌총수들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재벌에 의한 經濟力の 過渡한 集中은 여러가지의 심각한 폐해를 수반하고 있다. 우선 경제력이 과도하게 소수의 대기업집단에 집중될 경우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고 社會的 不平等을 증가시키며, 經濟의 전반적인 效率性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소수에 의한 경제지배로 社會的 摩擦을 증가시키게 되고, 독과점화 및 내부거래의 증대로 경쟁적인 市場機構가 작동하는 영역을 축소시키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經濟民主化를 막고 政經癒着 등으로 政治發展까지도 저해하는 기제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줄여나가는 것은 社會的 衡平和 和合의 달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경쟁적인 시장제도의 확립과 經濟的 效率性의 제고를 위해서도 요청된다 하겠다.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위한 정책들로는 財閥企業들의 公開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소유의 분산과 더불어 所有와 經營의 分離를 촉진시키고, 재벌들이 부동산 투기나 財테크에 의한 기업확장을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 상속세, 증여세 등을 철저히 징수

하여 세대를 거치면서 經濟力의 集中이 緩和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정부의 경제력집중 완화대책은 金融, 租稅, 産業政策 등 제반 경제정책에 걸쳐 유기적으로 연관되고 종합적으로 추진될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4) 健全한 勞使關係制度의 確立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自由市場經濟體制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안정적인 勞使關係에 바탕을 둔 産業平和의 달성이 전제된다. 노사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노사문제가 정치화될수록 사회 전체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은 상승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이 바로 勞使關係制度가 안정화되지 못한 데에 기인하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전의 制度化가 우리의 목표라면,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협조와 노력은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勤勞者들과 經營者들 사이의 관계가 안정되어야만 생산적인 협조와 노력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정부의 역할은 한편으로는 과거의 소극적인 노동운동 억제정책에서 탈피하여 건전한 勞動運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教育을 통하여 노사관계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勞動市場政策을 통하여 生産構造, 市場構造에서의 변화에 노동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자율적인 단체교섭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별 단체교섭에의 불필요한 정부 개입을 억제하고, 民主的·協調的 勞使關係의 정립을 위하여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등의 제반 노사관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勞·使·政間의 協議·協力體制를 강화하여, 국민경제운영에 있어서 勞·使·政의 역할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또 기업들로 하여금 기업경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企業經營과 經濟問題에 대한 근로자들의 적극적 참여의식과 책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필요한 한 가지 전제조건은 기업주의 전근대적인 소유의식을 불식시키고 所有와 經營의 분리를 촉진시켜 장기적인 시각에서 산업평화 달성의 기반을 닦는 일일 것이다.